문화와 정치 제9권 제3호 | 2022, pp. 197-234

‘권력투쟁’의 정당화?:
한반도 안보위기시 외세 담론과 국내정치*

박홍서**

| 국문요약 |

한반도 안보위기시 한반도 정치세력은 외세(강대국) 담론을 활용해 자파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행태를 보인다. 배격론 세력은 외세의 위협을 강조해 내부 결속을 강화한다거나 경쟁 정치세력을 외세 추수세력으로 규정하고 공격한다. 의탁론 세력은 강대국의 지원을 통해 정치 권력을 유지하거나 정치 권력의 탈취를 시도한다. 실용론 세력은 배격론 및 의탁론 세력과 달리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라는 문제해결을 우선시한다. 실용론 세력은 우호적 외세 혹은 적대적 외세라는 선험적 이분법을 거부하고 안보위기 해소에 긍정적일 경우 어떠한 외세라도 협력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한다. 실용론 세력은 배격론 및 의탁론 세력이 안보위기 해소라는 문제해결을 저해한다고 비판하는 반면 배격론 및 의탁론 세력은 실용론 세력을 각각 외세 추종적이거나 우방과의 관계를 훼손한다고 공격한다. 향후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에 대한 경직된 이분법을 지양하고 문제해결이라는 목표로부터 출발해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 **핵심어**: 외세, 담론, 한반도, 슈미트, 푸코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6077335).

**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hongseo@hanmail.net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조선 시기부터 현재까지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생산·유통된 외세 담론을 유형화하고 그 정치적 배경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외세 문제가 한반도 정치세력간 대립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외세 담론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본 논문은 그 주제의 희소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비교해 일정한 차별성을 갖는다. 비록 소수이긴 하나 본 논문과 유사하게 한반도 국내정치의 맥락에서 외세 및 민족주의 담론을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이후 재조지은(再造之恩) 담론이 소비되는 정치적 맥락을 분석한 연구(한명기 2007, 191-230)나, 임진왜란과 청일전쟁 시기 일본에 대항한 민족적 일체감 및 국민국가 형성을 분석한 연구(김자현 2019, 23; 황태연 2017, 20) 등이 그것이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에서 각각 형성된 반공 및 반미 담론에 대한 분석도 존재한다(한성훈 2012, 224-226; 조희연 2010, 93-104). 아울러 국가에 의한 관변 민족주의나 사회 저항세력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민중을 '주체화'하고 '동원'하려는 정치권력의 행태에 대한 분석도 존재한다(임지현 2008, 55-57; 이남희 2015, 80-81; 허영란 2013, 31; 황병주 2011, 272-275). 그러나 이들 연구는 특정 사례에만 분석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비판이론을 통해 외세 담론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시적인 분석으로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본 논문과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은 현상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그 방법으로 한다. 비판이란 무엇인가? 논자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상식적 현상에 대한 '문제화(problematization)'라는 공통된 속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국민경제학은 자신이 개진해야 할 것을 가정한다"라고 비판하는 칼 맑스(Karl Marx 2010, 72)나, "진리는 권력에의 의지"에 불과하며 "원인은 결과에 따라 날조돼 삽입된 것"이라는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W. Nietzsche 2003, 335-338), 그리고 비판적 태도를 "그런 식으로 통치받지 않으려는 기술"로

규정하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2016, 45)는 모두 '진실(truth)'이라 간주되는 것에 대한 문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반도 정치세력에 의해 생산·유통되어 온 외세 담론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 권력에 대한 슈미트(Carl Schmitt) 및 푸코 등의 이론적 논거를 토대로 정치적 행위의 특징이 우·적 구분에 따른 권력투쟁일 수 있음을 검토하고, 그러한 정치적 행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외세 담론의 특징을 설명할 것이다. 3장에서는 조선 시기부터 현대까지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주요 정치세력의 발언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외세 담론을 의탁론, 배격론, 그리고 실용론으로 구분할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담론과 부합되지 않는 정치세력의 실제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외세 담론이 갖는 '정치성'을 드러낼 것이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의 현재적 함의와 외세의 정쟁화를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간략히 모색할 것이다.

물론, 본 논문이 유형화하는 외세 담론은 '이념형'에 불과하다. 특정한 외세에 대해 배격론을 주장하는 세력이 동시에 또 다른 외세에 대해 의탁론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각 정치세력이 특정한 외세 담론만을 생산한다고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보다 본 논문은 외세 담론과 그 생산·유통자들의 실제 행태 사이의 '불일치'에 주목함으로써 외세 담론이 국내정치적으로 소비되는 양상에 그 분석 초점을 맞출 것이다.

II. 정치적 행위와 외세 담론

카를 슈미트(2012, 38-40)는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의미를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도덕적 행위가 선악을, 미학적 행위가 아름다움과 추함을, 그리고 경제적 행위가 이익과 손해를 각각 판별하는 행위라면, 정치 행위는 기본적으로 우·적이라는 진영논리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이러한 현실주의적 관점은 정치적 갈등을 적확히

포착해내지 못하는 자유주의 시각의 '무능력'을 교정할 수 있다. 상탈 무페(Chantal Mouffe 2007, 14-15)가 지적하듯이, 합의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확산될 것이라 예상됐던 탈냉전 시기조차 국가 및 민족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 과정에서 우·적 대립이 소거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쟁이 우·적 대립의 극단적 상태라면, 따라서 정치적 행위는 완화된 형태의 전쟁행위라 할 수 있다. 심지어 니체는 인간의 삶을 전쟁의 한 귀결로 간주하며 사회 자체가 전쟁을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한다(프리드리히 니체 2003, 57). 사실, 우·적 대립이라는 정치적 실체는 인간 상호간 정치 현상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 프란스 드발(Frans de Waal 2019, 23-24)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우·적 구분에 기초한 세력다툼이 침팬지 사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에 대한 푸코(Foucault 2003a, 96)의 해석 역시 전쟁과 정치 사이의 등치가능성을 보여준다. 푸코는 리바이어던이 만인 대 만인의 전쟁상태를 종결시킨 것이 아니라 '은폐'한 것이라는 전복적 해석을 시도한다. 권력이 강조하는 사회 질서의 표층 아래에서는 인민에 대한 권력의, 그리고 인민 상호 간의 '조용한 전쟁(silent war)'이 일상적으로 목격된다는 것이다. 이렇다면, 권력은 전쟁상태라는 외재화된 '공포(fear)' 속에서 인민들의 살고자 하는 '의지(will)'를 조합해 '주권(sovereignty)'을 정당화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전쟁은 또 다른 수단의 정치'라는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의 도식은 '정치는 또 다른 수단의 전쟁'으로 역치될 수 있는 것이다(Foucault 2003a, 15-16).

물론, 현실 정치를 물리적 권력투쟁만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그것이 정치의 원초적 영역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양상을 정당화하거나 은폐하는 비물리적 요인들이 보편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람시(Antonio Gramsci)가 지적하듯이 권력에 의한 지배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피통치자들로부터의 '동의(헤게모니)'를 확보할 때 비로소 원활해진다. 만약 인민으로부터의 동의가 상실되고 원초적인 폭력 수단을 통해서만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곧 '권위의 위기'를 초래한다(안토니오 그람시 2006, 246; 327).

'담론(discourse)'은 권력이 동의를 획득하기 위한 대표적인 비물리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담론은 언어의 형식으로 수행되는 권력의 정치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권력은 사회 행위자들의 사고와 행동을 권력의 이해관계에 맞춰 구조화시키려 한다(사라 밀즈 2001, 21; Adams 2017). 미셸 푸코(2011, 13-21; Foucault 2003b, 316-318)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권력은 담론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사회적으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진리체계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권력의 효과를 전 사회 영역으로 확산시킨다. 이러한 푸코의 논의는 그 스스로 밝히듯이 결국 니체로 수렴된다(Foucault 2003b, 318). 즉, 세상은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존과 권력 증대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해석'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프리드리히 니체 2003, 303).

정치적인 것의 핵심이 우·적 대립이며, 동시에 담론은 그러한 실체를 정당화하거나 은폐하는 기능을 한다면 국가 수준에서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정치 담론의 대표적 소재가 될 수 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2012, 124-125)가 설명하듯이, 권력은 정치적 통일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로부터의 위협(내적)과 외부로부터의 위협(외적)을 동시에 관리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와 같다면, 권력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정치화해 '보호-복종' 논리를 인민에게 각인시키거나 인민의 희생과 적에 대한 살인을 강요하며, 동시에 적에 동조하는 '내부의 적'을 제거하려할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카를 슈미트 2012, 62-63; 69). 외부 위협을 통해 반란 등 내부위협을 차단하는 것이 국가를 보존하는 최선의 전략이라는 보댕(Bodin, 173-174)의 주장이나, 국가 수립 자체가 전쟁으로 달성된다는 틸리(Tilly 1985, 170-172)의 설명, 그리고 최고 정책결정자가 국내정치적 이익확보를 위해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구사한다는 소위 '주의전환(diversionary)' 이론(Levy 1989) 등은 모두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한편,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권력 구조의 '복수성'이다. 한 국가의 권력 구조가 일인 독점형 체제가 아니라면, 그 안에는 상호 경쟁하는 정치세력들이 상존한다. 따라서, 각 정치세력은 자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부 위협에 대한 상호 차별적 담론을 생산해 활용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

다. 특히, 대외 안보위기는 외세에 관한 정치세력 간 담론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구르비치(Gourevitch 1978, 899-900)의 설명과 같이, 영국혁명,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그리고 중국혁명이 대외전쟁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대외 안보위기 상황에서 외세는 그만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반복적으로 전개되어왔다. 한반도 정치세력들이 생산해온 외세 담론은 역시 우·적 구분이라는 정치적 이분법에 따라 소위 '좋은(우호적) 외세' 담론과 '나쁜(적대적) 외세' 담론으로 양분될 수 있다. 좋은 외세 담론이 외세를 한반도 이익 증진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간주한다면, 나쁜 외세 담론은 외세를 한반도 이익을 훼손하는 존재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 정책적 대안으로 전자는 '외세 의탁론'을 주장하며, 후자는 '외세 배격론'일 주장한다. 한편, 이들과 달리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라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외세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는 '실용론'도 존재한다.

외세 배격론은 권력과 피치자 간 보호-복종 논리가 투사된 가장 일반적인 외세 담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배격론 세력은 외부의 적에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대내 행위자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한다. 반면, 외세 의탁론은 보호-복종의 논리가 대외관계로까지 확장된 형식을 갖는다. 즉, 의탁론은 한반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우호적 외세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에 협력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러한 의탁론은 한반도 국가와 외세 간 비대칭적 세력관계로 인해 의탁이 불가피하다는 구조 결정론적 시각을 보이거나, 의탁 자체가 이데올로기화되는 관념적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우호적 외세와 거리를 두려는 대내 행위자는 의탁론 세력에게 적으로 간주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배격론과 의탁론의 발화자가 동일 주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자호란기 대후금 척화론을 주장했던 주체들은 동시에 명에 대한 의탁론을 강조하였다. 또한, 19세기 말 개화세력은 청을 배격함으로써 조선의 독립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일본에 의탁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해방시기 이승만 세력이 신탁통치에 반대하면

서도 미국에 협력적이었던 사실이나, 박정희 정권이 민족주의 및 자주국방 담론을 확산시키면서도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했던 사실 역시 이를 보여준다.

한편, 실용론은 배격론이나 의탁론과 달리 우호적 외세와 적대적 외세라는 이분법적 접근에 반대한다. 듀이(Dewey 1908, 85-86)의 설명과 같이, 일반적으로 실용주의(pragmatism)는 세계를 원칙이나 범주, 혹은 필연성이 아니라 결과나 사실의 맥락에서 접근한다. 즉, 실재(reality)를 완성된 것이 아니라 부단히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실용론 역시 위기 해소라는 문제를 최우선적인 고려 대상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실용론은 경직된 우·적 구분을 전제하는 배격론 및 의탁론과 달리 안보위기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외세에 대해서도 유연한 접근을 시도한다.

그럼에도 실용 담론이 대내외적으로 우·적 구분을 완전히 거부하는 '탈정치화'된 특징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실용론 역시 안보 위기 해결에 장애를 초래하는 세력이 누구인가라는 기준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우·적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즉, 실용론은 안보위기 해결에 장애를 초래하는 세력을 비판하고, 그 반대 세력을 협력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실용론은 그만큼 배격론 및 의탁론 양편으로부터 '협공'을 당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배격론은 실용론을 외세 추수적이라고 공격하면서 의탁론과 동일시한다면, 반대로 의탁론은 실용론이 우호적인 외세를 배척하려 한다는 논리로 공격한다.

III. 한반도 안보위기와 외세 담론

1. 외세 배격론: '나쁜 외세와 그 내응자'

외세 배격론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간, 그리고 강대국과 한반도 사이의 물리적 세력관계에 비해 한반도 행위자의 '능력'을 강조하거나 과장

하는 관념적 경향을 보인다. 병자호란 시기 인조 정권의 대후금 인식은 이러한 배격론의 속성을 보인다. 인조정권은 명에 대한 의탁론과 대후금 배격론을 동시에 생산하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후금을 인간이 상종하지 못할 '금수'로 간주하고 대후금 유화 세력을 공격하였다. 광해군이 오랑캐와 화친해 조선을 '오랑캐 금수(夷狄禽獸)'로 만들었다는 인조반정의 교지 내용이나(『광해군일기』 [중초본] 15년 3월 14일 갑진), 예의의 국가인 조선은 '견양(犬羊)'과 같은 오랑캐에 순종할 수 없다는 병자호란 직전 홍문관의 상소(『인조실록』 14년 2월 21일 병신)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인조 정권의 실제 대후금 정책이 이러한 배격론과 달리 상대적으로 유화적이었다는 사실은 배격론의 정치성을 반증한다. 대후금 배격론은 이미 광해군 집권 시기부터 다수 신료들의 중론이었다. 광해군 집권 마지막 5년 동안 인목대비 폐출을 주장하는 상소가 계속해 올라왔다는 사실과 달리 대후금 유화책을 지지하는 상소가 한 건도 올라오지 않은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계승범 2008, 448). 그럼에도, 배격론 세력의 실제 행태와 담론이 합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부로 자강하지 않고 밖으로만 큰소리(內不辦事, 外務大言)"를 친다거나, 무장들은 후금과의 결전을 주장하지만 막상 무사들은 변경지역 주둔을 회피한다며 대후금 강경책을 "부질없는 헛소리(徒虛語耳)"라고 비판한 광해군의 발언은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다(『광해군일기』 [중초본] 13년 6월 6일 병자).

반정 이후 이괄의 난 사례도 배격론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 단적으로 한윤 등 반란 잔존 세력이 후금에 투항하고 이후 조선 침공에 일조한 사실은 배격론이 권력투쟁 논리에 종속돼 있음을 반증한다(한명기 2016, 125-126). 또한, 인조 정권이 병자호란 직전 삼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금에 대해 '기미책'을 구사하려 했다는 사실이나(『인조실록』 14년 11월 16일 병진), 심지어 대후금 강경파들을 억압했다는 사실은 배격론이 실제정책으로 실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화친을 비판하는 자들이 억압적인 분위기가 두려워 모두 침묵하고 있다는 부교리 윤집의 비판은 이를 뒷받침한다(『인조실록』 14년 11월 8일 무신).

19세기 척화 담론은 서구 열강과 메이지 일본을 상종할 수 없는 '견양'

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호란기 척화론과 동일한 관념적 속성을 드러낸다. "화친론은 인류가 금수의 영역에 떨어지게 한다"는 병인양요 당시 이항로의 주장이나, 일본은 "추호의 인리(人理)도 없으니 단지 금수일뿐"이라는 최익현의 강화도조약 반대 상소는 이를 보여준다(『근대 한국 국제정치관 자료집 I』 2012, 10/31). 또한, 이만손이 『조선책략』의 저자 황쭌센을 "스스로 금수와 같아졌다"라고 비판한 것이나, 홍재학이 "오륜오상(五倫五常)을 저버리면 금수로 변해 천지가 뒤집힐 것"이라고 성토한 사실 역시 동일한 맥락이다(『근대 한국 국제정치관 자료집 I』 2012, 67-68).

19세기 척화론 역시 정파적 이해관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척화세력은 척화론을 통해 경쟁하는 대내 정치세력을 공격하고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려 하였다. 병인양요 시기 "고통을 참지 못하고 화친을 허락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라는 대원군의 주장이나(『근대 한국 국제정치관 자료집 I』 2012, 3), "양적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은 나라 편 사람들의 말이고, 화친해야 한다는 것은 적의 편 사람들의 말"이라는 이항로의 주장은 이를 단적으로 시사한다(『근대 한국 국제정치관 자료집 I』 2012, 10). 이들은 금수인 양적에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자는 누구나 국가 안정을 위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억압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특히, 대원군 세력은 고종 세력과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척화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영남 만인소(萬人疏) 세력을 둘러싼 양측간 대립은 이를 반증한다. 1874년 대원군 봉환상소를 주도하는 등 대원군 지지를 표방한 만인소 세력은 1881년 척화 상소를 통해서 고종 정권의 개방정책을 비판하였다.[1] 이만손은 척화상소를 통해 "병인양요를 천토(天討)함으로써 추악한 무리들이 놀라서 숨었다가 10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째서 선왕의 시대엔 그처럼 엄하게 물리치시다가 전하의 시대에 와선 용납하시는 것이냐"라며 고종을 힐난하였다(『근대 한국 국제정치관 자료집 I』 2012, 65). 이만손은 간접적으로 대원군 시기 척화정

1) 1874년 대원군 봉환 상소를 매개로 한 대원군과 고종 정권의 정치적 대립에 관해서는 정진영(1997, 206-214) 참조.

책을 고종의 개방정책과 대비시키고 우위에 둠으로써 고종 정권을 공격한 것이다.

고종 정권이 척화 상소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를 위협적으로 인식했음을 시사한다. 고종은 이만손에 대해 상소가 "흉포하고 패악스럽다"라는 이유로 국청을 통해 형문(刑問)을 가했으며(『승정원일기』 고종 18년 4월 2일 계사/4월 3일 갑오), 또 다른 주도자인 홍재학에 대해서는 "흉패한 어구들로 임금을 핍박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비난하면서 참형을 가하기까지 하였다(『승정원일기』 고종 18년 윤7월 8일 무술/7월 20일 경술). 임오군란을 교사해 정국을 장악한 대원군이 유배중이던 이만손을 즉각적으로 석방한 사실이나(『승정원일기』 19년 6월 12일 임오), 반대로 임오군란 진압 이후 실권을 회복한 고종이 전국의 척화비를 전격적으로 철폐한 사실 역시 척화론을 매개로 한 대원군 세력과 고종 정권의 정치적 대립을 반증한다(『고종실록』 19년 8월 5일 무오).

최익현에 대한 고종 정권의 이중적 태도 역시 척화론의 정치화를 드러낸다. 최익현이 강력한 척화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원군의 내정폐단을 공박하자 고종은 "안으로 정치를 잘하여 밖으로 외적을 물리치는 방법(內修外攘之方)은 매우 내 뜻에 맞다"라고 지지를 표명하였다(『승정원일기』 고종 5년 10월 25일 무진). 더욱이 최익현의 상소로 1873년 고종의 친정체제가 현실화되자, 고종은 그를 파격적으로 호조참판으로 승진시키고 최익현을 비난하는 동녕부 영사 홍순목, 좌의정 강노와 우의정 한계원을 파직하였다(『승정원일기』 고종 10년 10월 25일 경자; 11월 3일 무신; 11월 11일 병진).

반면, 고종은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대한 최익현의 반대 상소에 대해서는 이전과 다른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고종은 "이번에 왜선이 온 것이 양인과 합동한 것인 줄 어떻게 확실히 알겠는가"라며 최익현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최익현의 상소에 내가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일에 엄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여 … 임금을 터무니없이 핍박하는 말을 만들어 방자하게 배척하고 … 헐뜯어 욕하였다"라며 비난하였다(『승정원일기』 고종 13년 1월 27일 기미). 고종의 친정체제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최익현의 완강한 척화론은 그만큼 대외정책에 부담으로 작동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

하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반탁 담론 역시 배격론적 속성을 보인다. 3상회의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임정이 주도해 결성한 신탁반대 국민총동원 위원회의 성명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성명서는 "5천년의 주권과 3천만의 자유를 전취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정치활동을 옹호하고 외래의 탁치세력을 배격함에 있다. 우리의 혁혁한 혁명을 완성하자면 민족이 일치로써 최후까지 분투"할 것을 강조하였다(민중일보 1945/12/30). 그러나 반탁 담론은 3상회의의 결정 내용에 대한 적확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자기예언적 속성을 보인다. 3상회의 합의문은 임시정부 수립(1조),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의 개최(2조), 그리고 임시정부와 협의하 신탁통치에 관한 협정의 4개국 공동심의 회부(3조)를 규정하였다. 반탁세력의 주장과 달리 3상회의의 주 결정사항은 강대국에 의한 장기간의 일방적 신탁통치가 아니라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박현채 외 2008, 229-231).

해방 시기 탁치 논쟁의 배경에는 권력 공백기 권력 선점이라는 각 정치세력의 현실적 의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919년 이래 '임정법통론(臨政法統論)'을 주장해온 임정 세력으로서는 자파를 인정하지 않는 3상회의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었다. "우리는 피로써 건립한 독립국과 정부가 이미 존재하였음을 다시 선언한다"라는 임정의 반박논리는 이를 시사한다(동아일보 1945/12/30). 동일한 맥락에서 애초 좌익 세력이 반탁을 주장한 배경에도 조선인민공화국 사수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오코노기 마사오 2020, 565).

무엇보다 반탁 세력은 반탁 담론을 활용해 경쟁 정치세력을 견제하고 자파의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려 하였다(박현채 외 2008, 267). 특히, 좌익 세력의 친탁 선회 이후 우익 세력은 그들을 소련과 결탁한 '민족반역자,' '신사대주의자,' '국제추수자,' '망국음모,' 혹은 '국론통일의 분열자'라고 비난하면서, 좌익 세력을 대중으로부터 유리시키고 정국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박현채 외 2008, 297; 브루스 커밍스 2008, 293). 좌익의 친탁 선회 직전까지 임정-인공 간 합작 협상이 진행중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임정

이 일관되게 자파 중심의 통합원칙을 완강히 고수하면서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는 사실은 탁치를 둘러싼 좌우의 대립이 권력투쟁의 '결과'였음을 암시한다(박현채 외 2008, 247). 동일한 맥락에서, 찬탁 선회 이전 좌익 세력 역시 반탁 담론을 이용해 우익 세력을 공격하였다. 조선공산당은 즉각적인 독립보다 훈정기(訓政期)가 필요하다는 '민족반역자와 친일주구배들의 책동'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탁치 결정의 배경이라고 비난한 것이다(중앙신문 1946/1/1).

이승만 세력 역시 반탁을 활용해 좌익을 공격하는 전략적 행태를 보였다. 탁치 정국 이전 이승만은 미군정의 지원하에 "한인이 차차 배워가며 자치자립할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거나(매일신보 1945/10/18), "조선독립은 연합국이 결정할 것"이라는 발언과 같이 조선의 즉시 독립이 어렵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자유신문 1945/11/20). 이승만과 협력적인 한민당 역시 애초부터 군정단계의 훈정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었다(오코노기 마사오 2020, 257). 이러한 입장에 따라 탁치 정국 초반 이승만 세력은 반탁에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였으나, 좌익의 찬탁 선회를 기점으로 적극적인 반탁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군정과의 대립까지도 불사하며 반탁을 주장하는 임정 세력과 달리 이승만 세력은 미군정에 대한 협조를 기반으로 좌익을 '소련의 주구'로 호명하고 자신들을 '민족적 이익의 대변자'로 과시하면서 정국의 주도권 장악을 시도하였다(브루스 커밍스 2008, 290-291). 이승만은 자신이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를 제 조국으로 삼는 공산당 일부 극렬 파괴주의자를 경계하는 것이며, 자신과 같은 건설자와 그들과 같은 파괴자는 협력할 수 없다는 논리로 좌익세력 배제를 정당화하였다(서울신문 1945/12/21).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민족반역자나 친일파는 일소하여야 하지만 지금은 우선 우리의 힘을 뭉쳐 놓고 볼 일이다"라는 이승만의 이전 발언과 모순된다(매일신보 1945/11/6). 친일 민족반역자조차 연대의 대상이 된다면 왜 좌익은 그 대상이 될수 없는가라는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후 이승만 세력이 단독정부 수립를 둘러싸고 이에 반대하는 김구조차 "크레믈린 궁의 한 신자"라고 비난한 사실(송건호 외 2008, 385)은 이승만 세력의 친

미 · 반소 · 반공적 배격론이 권력 선점의 수단으로 작동했음을 시사한다.

박정희 정권의 '관제' 민족주의 역시 외세 배격론적 속성을 나타낸다.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초 미소 데탕트와 미중 화해 등 강대국 관계의 이합집산이 약소국 한국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다. 박정희(2017b, 52)는 1970년대 초 상황을 19세기 구한말의 상황과 대비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중소국가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는" 서구 열강을 비판하였다. 박정희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자주적인 노력을 포기한 채 사대와 분열에 빠질 경우 망국의 설움마저 자초"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특히,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 담론은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었다. 박정희(2017a, 245)는 냉혹한 국제관계 현실 속에서 "불어닥칠 도전은 비단 공산집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방 안에도 있다"라고 주장하거나, 한국이 "정치적 자주성"을 획득하기 위해 긴요한 조치를 취할수록 "부당한 외세의 간섭"이 커질 수 있으며, 이러한 외세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물리칠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 담론은 심화된 통치 위기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박정희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반공 규율과 경제발전을 전면에 내세우며 통치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그러나 1969년 미 닉슨 정권의 취임 이후 추진된 유화적인 대소 · 대중 외교로 반공 규율전략의 활용공간이 축소되고, 한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더욱이 3선개헌과 1971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급증한 통화발행 및 인플레이션은 통치 위기를 심화시켰다(박홍서 2021, 29-34).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은 민족주의 담론을 활용해 북한 정권 및 남한 내 경쟁 세력을 공격함으로써 통치위기의 돌파를 시도하였다. 한반도 분단을 "국제공산주의라는 외래의 사상과 그것을 추종한 북한공산집단에게 있다"라거나, 공산주의는 "조상 대대로 이어온 우리의 민족정신이나 문화전통과 도저히 상용될 수 없다"라는 박정희(2017b 163; 165)의 주장은 이를 시사한다. 한편, 3선개헌 문제에 미국의 개입을 요구하는 김영삼을 "외세 의존적인 고루한 사대주의 사상에 젖은 일부 정치인의 전형적 표본"

이라고 공격한 사실이나(경향신문 1969/7/23),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의 '4대국 전쟁억제보장' 주장을 해방기 신탁통치론에 비유하면서 "외세 의존 사상의 소산"이고 "기회주의적이며 망상적인 허수아비 안보론"이라 공격한 사실 역시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경향신문 1971/4/15).

무엇보다 박정희는 민족주의 담론을 활용해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는 행태를 보였다. 박정희는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남침에 가담하였던 중국이 유엔 안보이사국이 되었으며 동시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지원도 불확실하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또한, 북한이 강대국간 현상유지라는 국제정세를 역이용해 적화통일에 나서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당리당략이나 무책임한 안보론이 난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6.25 전야를 상기시켰다.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박정희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향유하는 자유의 일부마저도 스스로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매일경제 1971/12/6). 박정희(2017b, 57)는 외세를 추종하는 북한을 '민족반역집단'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극소수의 파괴적 자유를 규제함으로써 절대다수의 생산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 역시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는데 활용하였다. "최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라는 충격적인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모든 국민이 의연한 결의와 자세를 견지해 나가고 있음은, 실로 우리의 생산적인 민주제도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박정희(2017b, 66)의 발언은 이를 단적으로 뒷받침한다.

박정희 정권의 실제 행태가 외세 배격론과 합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배격론의 정치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 시기가 1971년 대선과 일치한다는 사실에 박정희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미국의 평가나(우승지 2005, 421),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미국에 통보하면서 남침 조짐이 없다고 한 사실(Telegram 1971/12/2), 그리고 유신체제 선포 직전 북한에 사전 통지했다는 사실(신석호 2009) 등은 박정희 정권의 배격론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됐음을 암시한다. 또한, 박정희(2017b, 186-187)는 "자기 나라의 국방을 남에게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주한미군 철

수를 자주국방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지만, 실제에서는 '코리아게이트' 사건이 보여주듯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하면서까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저지하려는 행태를 보였다(박태균 2007, 336-338). 박정희가 1979년 6월 카터와의 회담에서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데 '비할 데 없는 역할(incomparable role)'을 한다는 논리를 들어 철수를 완강히 반대한 사실(Memoranda of Conversation 1979) 역시 표면적인 자주국방 담론과 합치된다고 할 수 없다.[2)]

2. 외세 의탁론: '좋은 외세와 그 배척자'

배격론이 한반도의 자율성을 강조한다면, 의탁론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변 강대국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구조 변인을 중시한다. 임진왜란 이후 소위 '재조지은(再造之恩)' 담론은 그러한 의탁론이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극화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재조지은 담론의 생산자들은 임진왜란 당시 명이 군사개입을 통해 조선의 망국을 차단했기 때문에 조선은 대명 사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인조반정은 이러한 재조지은 담론이 대내 권력투쟁 과정에서 소비되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인조반정 세력은 대후금 배격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명에 대한 강고한 의탁론을 유통시켰다. 상술한 바와 같이, 반정세력은 광해군이 재조지은을 배반했으며 후금과 화친함으로써 예의지방인 조선을 금수로 만들었다고 격렬히 비난하였다. 인조는 반정 직후 마오원룽(毛文龍)의 차관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광해군이 재조지은을 배반해 폐위됐음을 밝히면서 명과 협심해 후금을 토

2) 본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박정희 정권의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철수 반대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주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행태라고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은 주한미군 철수 상황에서 전략무기 개발 등의 자주국방 강화와 한국군 현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동맹의 재설정을 동시에 구사했다고 볼 수 있다(신욱희 2010, 54-55). 그러나 그러한 전략적 의도의 유무와 별개로 박정희 정권이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벌할 것임을 확약하였다(『인조실록』 1년 3월 21일 임자). 그럼에도 반정 이후 인조 정권의 실제 대외 행태가 재조지은 담론과 합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인조 정권은 마오원룽 지원을 통해 대명 소통을 강화하면서도, 그가 요구하는 군량 및 조선군 파병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한명기 1999, 361-365). 또한, 부호군 신성립이 재조지은을 이유로 명에 원병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인조실록』 8년 3월 11일 신묘).

조선의 정치세력은 병자호란 이후에도 재조지은 담론을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였다. 대표적으로 만력제와 숭정제에 대한 제향을 목적으로 하는 만동묘와 대보단의 설치는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노론 세력은 송시열 사후 그의 유지에 따라 건축한 만동묘를 활용해 소론과의 세력경쟁에서 자파가 '존주양이(尊周攘夷)'의 핵심 주체임을 과시하였다(임부연 2009, 169-171). 동일한 정치적 맥락에서 숙종 역시 대보단 설치를 통해 자신을 제후국의 왕에서 명 황제의 혈연적 후손이라는 상징적 지위로까지 격상시켰다(임부연 2009, 179-180). 영·정조 시기에도 대보단 제례는 왕에 대한 신하들의 충성심을 확보하는 기제로 활용됐다. 특히, 영조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던 홍무제에 대한 제사를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례에 추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력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계승범 2010, 171-178).

1801년 신유박해 당시 황사영 백서(帛書)는 기층단위에서 생산된 외세 의탁론이라 할 수 있다. 황사영은 베이징 천주교 본당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청과 서양 제국의 힘을 빌려 조선 정부에 대한 응징과 천주교도들에 대한 구원을 요청하였다. 황사영은 그 구체적 방법으로 중국 황제가 친왕(親王)을 임명해 조선을 감독하고 부마국으로 만들거나, 서구제국의 수백 척 군함과 5-6만의 군사가 내왕해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심지어 그는 전교를 거부하는 "이 나라를 전멸한들 성교의 표양에 해로울 것이 없다"라고 까지 주장하였다(이만채 1984, 306-309; 311). 이러한 황사영의 사고는 정도령의 도래를 염원하는 기층의 관념적 사고와 연결된다(조광 1977, 357). 베이징 본당조차 황사영의 요청을 현실가능성이 없는 "매우 해괴한 것"으로 간주한 사실은 그 관념적 사고의 한계를 반증한다(『순조실

록』 2년 4월 10일 경술; 박현모 2004, 126).

현실적으로 황사영 백서가 천주교 탄압으로 생존 위협에 직면한 교인 세력의 자구책이었다면, 반대로 노론 벽파 세력은 백서사건을 활용해 자파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려 하였다. 벽파 세력은 황사영의 행위를 "문을 열어 역적을 불러들이고, 9만리 바다 밖의 배를 불러다 날 잡아 국경을 범하게 했다"거나 "단군 · 기자 · 신라 · 고려 아래로 일찍이 듣지 못했던 일"이라며 맹렬히 비난하였다(이만채 1984, 255). 동시에 벽파세력은 경쟁 정치세력(시파)을 공격하는데 백서 사건을 이용하였다. "천주교를 박해하던 악당들이 벽파와 서로 연락이 있었는데 시세가 일변한 것을 보고서는 요란스럽게 일어났다"거나, "노론이 남인을 꺼리고 질투하여 애써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였고, "이런 일을 빙자해 배척하고 모함하는 자료를 삼은 것"이라는 황사영의 주장은 이를 시사한다(이만채 1984, 287; 304; 310).

1884년 김옥균 등 개화파가 주도한 갑신정변도 외세 의탁론이 국내정치적으로 소비된 양상을 보인다. 세관문제를 놓고 자신과 대립하던 묄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f)가 민씨 세력에게 "김옥균 제거가 조선문제 해결의 최우선 방책"이라고 조언했으며, "민영익이 청당(淸黨)의 괴수가 돼 모든 간악한 무리들과 개화파를 위협하고 모함했다"라는 김옥균(1971, 33-35)의 주장은 개화파와 수구파 간의 정치적 대립을 보여준다. 동일한 맥락에서 묄렌도르프 역시 김옥균이 방일 기간 예산을 낭비했으며, 위험스러운 음모가이며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어리석은(foolish)' 국가독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는데(Parkes 1883), 이는 양측의 대립이 인신공격으로까지 이어질 만큼 첨예하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갑신정변 정령(政令)의 제1조가 대원군의 환국을 명시하고, 새로운 내각에 대원군의 장자와 손자 및 대원군 계 인사를 포함한 사실(김옥균 1971, 93-94; 98) 역시 갑신정변에 투영된 권력투쟁적 속성을 드러낸다. 갑신정변 세력이 임오군란을 교사했던 대원군과 협조적 관계를 형성하려 했던 것은 민씨 세력에 대항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였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다면, 갑신정변 세력에게 일본의 지원은 국가독립이라는 명시적 목표에 앞서 정적 제거라는 현실적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김옥균(1971, 67)이 일본 공사 다케조에(竹添進一郎)에게 '내정개혁과 간신제거'는 자신이 맡고, 일본 공사는 군사를 동원해 거사를 보호하도록 요청한 사실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갑신정변 세력의 자기예언적 현실 인식은 결국 정변의 실패로 귀결되었다. 무엇보다 정변 세력은 일본 군대가 청군에 비해 열세라는 사실을 무시하였다. 김옥균(1971, 55; 67)은 당시 서울 주둔 일본군이 백 여 명이고 반면 청군은 천 여명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 뿐만아니라 정변 세력은 청일 양국이 조선 문제로 상호 전쟁까지 불사할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정변 당시 개입한 청군이 일본군과의 전면전을 회피했다는 사실, 상황이 불리해짐에 따라 다케조에가 김옥균(1971, 106)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사실, 그리고 청일양국이 조선을 배제한 채 천진조약을 체결한 사실 등은 모두 청일관계의 현실적 속성을 반증한다.

1896년 2월 아관파천을 전후한 고종 정권의 행태 역시 현실과 괴리된 의탁론적 속성을 보인다. 고종 정권은 삼국간섭 이후 러시아 세력을 활용해 일본의 위협을 견제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대러 의탁 전략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러일 양국의 담합 가능성을 경시한 자기예언적인 것이었다. 실제로 1896년 6월 러일 양국은 고무라-웨베르 각서와 모크바 의정서를 통해 서울을 경계로 한반도 남북을 각각의 세력권으로 설정하는데 합의하였다(이완범 2013, 118-121). 러시아로서는 삼국간섭을 통해 일본의 세력확장을 차단한 이상 일본과의 충돌을 불사하면서까지 조선을 전면적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이민원 2002, 129).

고종 정권의 소위 '인아거일(引俄去日)' 정책에서도 대원군 변수는 중요한 정치적 고려 대상이었다. 고종 정권이 아관파천을 '역괴난당(逆魁亂黨)'의 '흉모위계(凶謀詭計)'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로 정당화한 것은 이를 암시한다(『승정원일기』 고종 33년, 1월 1일[음 2.13]). 파천 직후 '존봉의절(尊奉儀節)'을 명분으로 대원군을 사실상 유폐하고 동시에 대원군 세력에 대한 대대적 숙청을 감행한 사실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興宣大院君史料彙編 2』 2005, 534-535).

사실, 고종 정권과 대원군 세력은 상호간 권력투쟁 과정에서 수시로 의탁 대상국을 바꾸는 전략적 행태를 보였다. 애초 척화를 주장하였던 대원군이 1894년 7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당시 적극적으로 협력해 정국을 장악했다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興宣大院君史料彙編 2』 2005, 125-126). 반면 이후 김홍집 친일 내각이 국정을 주도하면서 대원군 세력을 소외시키자, 대원군은 평양 주둔 청군에 남하를 요청하고 아울러 동학세력을 사주해 일본군에 대한 공격 및 친일 인사 암살을 기도하였다(『興宣大院君史料彙編 2』 2005, 414-417).

동일한 맥락에서 고종과 명성황후 역시 대원군 견제를 외세와의 관계설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간주하였다.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와의 접견에서 "일본과 제휴하고자 했던 민씨는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배척되었고 일찍부터 일본과 척(斥)했던 대원군은 일본공사에 의해 지원되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명성황후의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興宣大院君史料彙編 2』 2005, 383-384). 고종 정권이 동학세력 진압을 위해서 청군의 개입을 요청한 배경에도 대원군 견제라는 정치적 의도가 존재하였다. 명성황후가 '원병 요청이 일본의 개입을 초래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민영준의 우려를 일축하면서 자신이 임오군란 당시 겪은 '고초'를 상기시킨 사실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황현 2009, 340-341).

한편, 아관파천으로 상징되는 고종의 친러정책에는 고종의 권력의지 뿐만 아니라 각 정파들의 이해관계도 투영되었다. 친일내각이 국정을 주도하자 이범진 등 소위 아당(俄黨) 세력은 실권회복을 열망하는 고종과 명성황후에 접근해 왜당 세력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였다(황현 2009, 448; 458; 480). 당시 일본 공사관 역시 동일한 논리로 친러 세력의 행태를 평가하였다. 즉, 삼국간섭 이후 고종 정권 내 신파가 '군권수복설(君權收復說)'을 주장하며 왕과 왕비에 환심을 사 구파를 제압하였으며 러시아 공사관과 빈번히 접촉하고 있다거나, 아관파천 이후에는 이범진 등이 러시아의 비호 아래 권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興宣大院君史料彙編 2』 2005, 438-439; 448; 537).

해방 시기 박헌영 세력 역시 구조 결정론적 시각을 토대로 대소 의탁

담론을 생산·유통시켰다. 박헌영은 해방 직후 소위 『8월 테제』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조선민족이 자기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비판하면서 외부세력에 의해 조선해방이 이뤄졌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조선해방은 "세계혁명의 등대, 국제프롤레타리아의 조국 소련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승리를 달성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소련의 역할을 상찬하였다. 테제가 "만국 프롤레타리아의 조국 쎄쎄쎄르(소련) 만세"와 "세계혁명운동의 수령 스탈린 동무 만세"로 끝맺고 있다는 사실은 박헌영의 대소 의탁적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이정 박헌영 전집 편집위원회 2004, 47-55). 탁치정국에서 박헌영 세력이 소련 군정의 지령에 따라 전격적으로 친탁으로 선회한 사실 역시 박헌영 세력의 대소 순응적 태도를 보여준다.[3] 심지어 박헌영은 1월 5일 외신기자회견에서 소련의 단독 신탁통치를 반대하지 않으며 10년에서 20년 정도의 민주주의 발전후 소련연방에 편입이 가능하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4]

그러나 이러한 박헌영 세력의 대소 의탁론은 일정한 자기예언적 속성을 보인다. 무엇보다 미소 양국은 모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독립보다 자국의 이익 확보를 우선시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미소 공위 개회사에서 소련측 대표 시티코프(Terenti F. Shtykov)가 향후 "조선이 소련연방에 우호하고 소련에 대한 공격기지가 되지 않는 국가"가 되기를 피력한 것이나(자유신문 1946/3/21), "미국의 관점에서는 소련 지배로부터의 자유가 완전한 독립보다 더 중요"하다는 미 대표단원의 비망론은 이를 시사한다(커밍스 1986, 310). 또한, 소련이 1946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수립해 김일성 체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나, 미국이 1차 미소공위 전후 좌익에 대한 탄압을 개시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5]

---

3) 박헌영이 1945년 12월 28일 평양을 방문해 소련 군정 당국과 협의한 후 입장을 전환했다는 것이 '유력설'이지만, 이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서중석 1993, 318).

4) 박헌영은 이틀 후 신탁통치 관련 발언을 부인하였다(Johnston 1946). 미군정이 박헌영 발언을 왜곡해 친탁=친소, 반탁=반소·반공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주장은 정용욱(2003, 301-305) 참조.

5) 김일성으로의 권력 집중은 오코노기 마사오(2019, 599-603), 미국의 좌익 탄압은 브루

박헌영 세력의 행태 역시 정파적 이해관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무엇보다 조선공산당은 정치세력간 통일전선을 강조하면서도 그 연대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통일전선의 장애를 자초하였다. 박헌영은 기본적으로 친일세력 및 반연합국(反소·미·영) 세력을 나치 및 일제와 동일시할 정도로 타협할 수 없는 '적'으로 규정하였다(이정 박헌영 전집 편집위원회 2004, 260) 박헌영은 한민당 세력이나 친일문제 청산을 후순위로 간주하는 이승만 세력은 물론 김구의 임정 세력까지 타협할 수 없는 적으로 간주한 것이다.

특히, 박헌영은 김구의 임정 세력을 실제 반일 투쟁에 참가하지 않았고 인민 속에 토대를 갖지 못한 "일개 류맹(流氓)정치 쁘로카 집단"으로 폄하하면서(이정 박헌영 전집 편집위원회 2004, 686-687), 임정 주도의 반탁운동을 권력욕의 소산이라 비난하였다. 즉, 삼상회의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인하자 임정이 탁치를 의도적으로 기만하고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이었다(이정 박헌영 전집 편집위원회 2004, 671).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임정에 대한 비난 직전까지 박헌영 세력(인공)과 임정 사이에 합작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임정이 자파 중심의 통합원칙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임정에 대한 비난이 단순히 정치 노선상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박헌영 세력이 좌익진영 내에서조차 '장안파'와 같은 경쟁세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헤게모니를 독점했다는 사실 역시 이들의 현실적 권력 의지를 암시한다. 박헌영 세력은 해방 직후부터 자신이 주도하는 콤그룹의 투쟁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좌익진영의 주도권 장악을 시도하였다. 장안파가 식민지 시기 탄압에 굴복해 '반역자'가 되었고 또 해방 이후에는 조선공산당을 선점하려 하는 등 과거 파벌주의자들의 과오를 재현하고 있다고 극렬하게 비난한 것이다(강만길 외 2009, 135-137). 박헌영 세력은 1946년 11월 공산당, 인민당, 신민당 3합 당합 과정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조선공산당 내 반대파들을 강력히 징계하고, 동시에 인민당 여운형과 신민

스 커밍스(1986, 318-326) 참조.

당의 백남운을 소외시키기도 하였다(강만길 외 2009, 155-159).[6] 공산당 내 비당권파가 박헌영 세력을 '분파주의자'로 비난하면서 이들이 합당문제를 이용해 자신들의 관료주의적 지위를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좌익 진영의 다른 당까지도 자신들 일파로 흡수하려 한다고 성토한 사실은 좌익진영 내 권력투쟁의 단면을 보여준다(중외신보 1946/08/07).

3. 실용론: '문제해결과 그 방해자'

실용론은 한반도 안보위기의 해소라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배격론이나 의탁론과 같이 우호적 외세 혹은 적대적 외세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전제하기보다는 한반도 안보 위기 해소에 부합된다면 어떠한 외세에 대해서도 유연한 접근을 시도한다. 물론, 실용론이 우·적 구분을 완전히 거부하는 '탈정치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실용론은 배격론이나 의탁론처럼 특정한 행위자를 우·적으로 전제하기보다는,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라는 문제해결에 일조하느냐 혹은 방해하느냐에 따라 우·적을 구분하려 한다. 또한, 실용론의 생산 주체들은 배격론 및 의탁론 세력과는 달리 실제 행태와 담론 사이의 합치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호란 이전 광해군의 대후금 정책은 실용론적 속성을 보인다. 광해군은 '숭명배금'이라는 대후금 배격세력의 경직된 이분법을 비판하면서 전쟁 차단 및 국가생존이라는 문제해결을 우선시하였다. 예를 들어, 1619년 심하전투 당시 광해군은 파병군 대장 강홍립에게 "중국 장수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만 말고 오직 패하지 않을 방도를 강구하는 데에 힘쓰라"고 지시하는 등 전쟁상황에서조차 대후금 관계의 전면적 악화를 차단하려 하였다(『광해군일기』 중초본 11년 2월 3일 정사). 또한, 실제로 투항한 강홍립과의 서신교환을 신료들이 비판하자 광해군은 "한창 기세가 왕성한 적을 잘 미

6) 여운형은 일련의 3당 합당과정에서 '간판개조식' 합당에 반대하고, 3당 합당으로 인한 좌익 진영의 분열 책임을 자임하면서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함양여씨대종회 1991, 318; 348).

봉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국가를 보전할 수 있는 좋은 계책"이라고 하거나, "나의 뜻은 지금 이 노적이 비록 매우 사납게 날뛰지마는 진실로 솜씨 있게 변수에 대응한다면 충분히 전조처럼 재앙을 막고 국가를 지켜 병화를 입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면서 상황 악화를 차단하려 하였다(『광해군일기』 중초본 11년 4월 8일 신유; 4월 9일 임술).

광해군의 이러한 대후금 유화책은 유가적 규범인 '권도(權道)'의 구사 행위라 할 수 있다.[7] 즉, 왕도정치의 핵심 목표인 백성 보호를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한 사고와 전략을 발휘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대후금 배격론자들은 광해군의 행태를 유가 규범을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비윤리적 행위로 공격하였다. 광해군이 명을 배반하고 오랑캐와 화친해 조선을 금수의 나라로 만들었다라는 반정교서의 비판은 광해군에 대한 적대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동일한 맥락에서, 광해군은 대후금 배격론 세력을 안보위기 해소를 저해하는 세력이라 간주하였다. "우리에게 털끝만큼도 믿을 만한 일이 없는데 한갓 고상한 말로 천조를 꾸짖는 그들의 형세를 꺾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위망이 이르고야 말 것"이라는 지적이나(『광해군일기』 중초본 11년 4월 11일 갑자), "말로는 모두 전쟁을 하자고 큰소리를 치고 있으나 정작 전쟁터로 나가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다"든지, "고려에서 했던 것에는 너무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부질없는 헛소리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우리 나라 사람들이 끝내는 반드시 큰소리 때문에 나라일을 망칠 것"이라는 광해군의 지적은 이를 뒷받침한다(『광해군일기』 [중초본] 13년(1621) 6월 6일 병자).

물론, 광해군의 적극적인 전쟁 차단 의지 역시 종국적으로 정권 유지라는 현실주의적 목적과 동떨어져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인심이 극악해서 틈을 엿보아 재앙을 요행으로 여기는 자들이 수없이 많으니, 변방의 보루가 침략을 받는다면 경성이 반드시 허물어져서 임진왜란 때와 크게 다르

7) 권도는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보편적 도덕 규범인 경(經)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인의예지라는 도(道)의 실현에 부합한다면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행위이다(유칠노 1991, 37-39).

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광해군일기』 중초본 11년 12월 22일 신미). 집권 시기 계축옥사로 영창대군을 사사하고 인목대비를 폐위시킨 사실이나 능창군 옹립사건의 연루 세력을 강력히 탄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광해군으로서는 대외전쟁이 초래할 대내 정치적 위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병자호란기 최명길의 행태 역시 실용주의적 속성을 드러낸다. 최명길은 대후금 정책의 '난맥상'을 비판하면서 안보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후금과의 화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한결같이 우물쭈물하여, 나아가 싸우자고 말하고 싶으나 의구심이 없지 않고, 기미할 계책을 말하고 싶으나 또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하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진퇴가 분명치 않다"라는 그의 비판은 이를 뒷받침한다(『인조실록』 14년 9월 5일 병오). 또한, 조선의 시급한 목표가 "국가의 이익과 백성의 안녕"이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문제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 것 역시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인조실록』 14년 11월 15일 을묘).

아울러 최명길은 대후금 유화책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의 혁신으로 민심이 회복된다면 "비록 외환이 있다고 해도 대단한 낭패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강책을 강조하였다(『증보역주 遲川先生集 II』 2008, 258). 또한, 만약 유화책이 실패할 경우 의주성을 등지고 결전을 벌이는 것이 "손을 묶어두고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주장하며 실질적 문제해결에 소극적이던 인조정권내 지배적인 분위기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진격과 퇴각이 모두 거점을 잃게 될 것"이라는 논리였다(『증보역주 遲川先生集 II』 2008, 260-261).

최명길의 행태 역시 상술한 권도 전략의 실제화라 할 수 있다. 호란 후 최명길은 "역경을 만나 몸이 어떻게도 할수 없는 성에 갇혔을 때 길을 바꿔 통할 수 있게 하여 도(道)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큰 권도라고 할 수 있다"라고 논변하면서 후금에 대한 인조의 칭신은 문제될게 없음을 주장하였다(『증보역주 遲川先生集 II』, 304-305). 반대로 임금이 "황조(皇朝)를 위하여 절개를 세우려는 것은 필부가 구덩이에 시체가 되어 뒹굴려고 하는

신의에 가까울 뿐"이라며 그러한 행위는 국가와 백성에 대해 군주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증보역주 遲川先生集 II』, 829).

대후금 배격 세력은 최명길의 이러한 실용주의적 행태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최명길이 친후이(秦檜)도 하지 못한걸 했다"는 윤집의 신랄한 비난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인조실록』 14년 11월 8일 무인). 최명길은 이러한 비판에 친후이의 강화는 "그 이로움이 신하에게 돌아가고 해로움은 나라로 돌아갔다"며 자신이 주도한 강화는 그 반대라고 반박하며 자신의 '진정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증보역주 遲川先生集』 II, 830).

사실, 최명길이 병자호란 이전부터 붕당정치의 폐단을 비판하였다는 사실은 그의 정치 인식이 전통적 우·적 구분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원재린 2007, 131-132). 이러한 사고방식은 안보위기 해소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어떠한 세력과도 유연한 관계 설정을 모색하려는 실용적 행태와 연결된다. 병자호란 종결 직후 최명길이 조야의 반대를 무릅쓰고 명에 상황을 보고하려 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최명길의 행태에 대해 사관은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화친을 주장했는데, 지금에 와서 명나라에 주문(奏聞)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니, 이것이 과연 진정(眞情)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인조실록』 15년 2월 9일 기묘). 그러나 안보 위기가 일단 해소되고 그러한 상황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명과의 의사소통을 모색하려는 것은 오히려 최명길의 실용적 행태를 반증한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과정에서 보인 박규수의 행태도 실용적 특징을 보인다. 박규수는 전쟁방지와 이를 통한 신민의 안녕이라는 문제해결을 우선시하고 유연한 대일외교를 주장하였다. 박규수는 대원군에게 보낸 서신에서 왕도정치의 핵심이 "백성을 보호하는 것(保民)"임을 환기시키면서, 일본과의 절교는 백성들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瓛齋先生集』 卷之十一, 答上大院君[第四]). 또한, 좌의정 이최응에게도 "우리가 아무리 병사가 정예롭고 양식이 넉넉하다 하더라도 전쟁을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것만 못한데, 하물며 지금의 모든 일에 무엇을 믿고 반드시 변란을 일으키고야 말려드는가"라고 반문하며 전쟁 차단이 최우선적 사안임을 주

장하였다(『瓛齋先生集』 卷之十一, 答上左相[第四]).

따라서 박규수는 조선이 교부한 도서(圖書)를 날인하지 않았다거나 천황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일본의 서계를 접수하지 않는 것은 형식에 얽매여 전쟁을 조장하는 비합리적 행위로 간주하였다. 박규수는 그러한 행위를 "우호를 잃고 적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든지(『瓛齋先生集』 卷之十一, 答上大院君 甲戌), 일본의 "쌓인 분노가 폭발하면 반드시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여러 해 동안 우리나라를 엿보던 서양이 합세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瓛齋先生集』 卷之十一, 答上大院君 乙亥正月). 1875년 4월 일본이 운양호를 부산항에 입항시켜 조선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박규수는 "저들이 아직 위협하는 말을 하지 않고 사신의 행차를 호위한다고 핑계를 대니,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체하며 지금 무사히 해결해야지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본이 실제 군사행동을 한 이후 서계를 받는다면 "나라의 치욕"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제적인 대일협상을 주문하기도 하였다(『瓛齋先生集』 卷之十一, 答上大院君 乙亥五月).

그러나 결국 박규수의 우려대로 고종 정권이 일본군의 강화도 공격 이후 일본의 서계를 접수하려는 '치욕적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박규수는 이런 상황에서는 서계를 조건 없이 받기보다는 1867년 일본이 퍼뜨린 조선침공계획을 질책하고 그동안 서계접수가 지연된 것의 명분으로 삼는다면 최소한 '체면'은 잃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는 상황변화에 따라 최적의 대응책을 모색하려는 박규수의 실용적 태도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당시 조야에서는 박규수가 애초의 입장을 번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박규수는 이에 대해 이최응에게 "지금 이 말을 가지고 소생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여기신다면 진실로 난감하다"라며 이의를 표시하였다(『瓛齋先生集』 卷之十一, 答上左相[第八]). 또한 그는 이런 식의 교섭으로 일본이 향후 더욱 조선을 "업신여겨 변경을 침범해 온다면 서계를 받자고 주장한 사람에게 허물이 돌아올 것이 분명하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瓛齋先生集』 卷之十一, 答上左相[第九]). 박규수의 이러한 우려는 당시 대일 실용론 세력이 국내정치적으로 직면하였던 난관을 암시한다.

물론, 박규수 역시 전통적 화이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김명호 2005, 411-418). 만동묘 철폐에 대한 박규수의 강력한 반대는 이를 반증한다. "배신(陪臣)으로서 사당을 세워 천자에게 제향을 올리는 것은 본래 의기"이고, 만동묘로 인해 "하늘에서 의탁할 곳이 없는 황제가 조선만이 충의로운 나라이고 깨끗한 땅이라 생각해 이땅에 내려오실 것"이라든가, "백성들이 의를 부축하게 된 것도 오직 황제의 영령이 내려주신 것이고, 국가가 복록을 누림도 오직 황제의 영령이 내려주신 것이다"라는 박규수의 주장은 이를 단적으로 시사한다(『瓛齋先生集』 卷之六, 疏箚-辭職例疏皆不錄). 또한, 서양에서 천주교가 발흥한 이유가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적으로 중화의 성교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거나, 중국의 경서를 번역해 읽음으로써 서양은 결국 중국 성인의 교리에 귀의할 것이라는 그의 주장도 이를 뒷받침한다(『승정원일기』 고종 7년 3월 7일). 그럼에도 박규수가 안보위기 해소라는 문제를 그러한 존명(尊名) 의식에 '종속'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척화론자들과 비교해 명확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박규수는 중화 대 이적이라는 화이관을 척화론자들과 공유하면서도, 이적에 대한 유연한 외교 전략을 모색한 것이다.

박규수의 대외 인식은 그의 조부인 박지원의 '경제이용후생(經濟利用厚生)' 방책과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 박지원은 "조선이 중국황제에게 유교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할만큼 유교문명의 전통적 계승자임을 자부하면서도 동시에 "백성에 이롭게 국가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면 이적의 것이라도 배울게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김성배 2013, 123-125; 손형부 1997, 15). 이렇다면, 박규수가 척화세력에 대해 "이 세상에 만고토록 나라를 이루고서 예의가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었는가"라든가 "지금 번번이 예의의 나라라고 자칭하는 것은 예의가 어떤 물건인지도 모르면서 하는 말"(『瓛齋先生集』 卷之八 書牘, 與溫卿)이라고 비판한 것은 근대적 '만국공법'을 수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척화론의 비현실적 행태에 대한 반박이라 이해될 수 있다.[8)]

8) 예의지방에 관한 박규수의 비판을 만국공법의 수용으로 평가하는 시각과 그 반박은 김명호(2005, 400-404) 참조.

해방시기 여운형의 행태 역시 실용적 대외 인식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여운형은 민주주의적 통일국가 수립을 최우선의 목표로 간주하고 이념이나 외세는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간주하였다. 외세 의탁론(사대사상)과 배격론(배외주의)을 동시에 반대하면서 민주주의적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강대국과 좌우 이념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견지한 것이다. 미·소 군정에 대한 여운형의 태도는 이를 보여준다. 여운형은 연합군이 일본군 무장해제와 질서유지에 있어 "고마운 손님"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우리 살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루바삐 돌아가실 수 있도록 초당파적 견지에서 국가건설에 힘을 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함양여씨대종회 1991, 222; 240).

또한, 여운형은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이 '적색'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노동자, 농민, 일반대중을 위하는 것이 공산주의라 한다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되겠다"라고 반문하면서도 급진적 좌익이론이 조선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명확히 하였다(함양여씨대종회 1991, 218). 반대로 좌익진영이 자신을 '기회주의자' 혹은 '미제국주의의 주구'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인민을 위해 싸우는 것이 미 제국주의의 주구라면 달게 받겠다"라고 항변하기도 하였다(함양여씨대종회 1991, 362). 또한, 자신의 인민당은 임정을 배척하고 인공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공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며 어떠한 정부라도 정책이 합치된다면 협력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함양여씨대종회 1991, 250).

여운형은 신탁통치와 좌우합작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해결에 장애를 초래하는 세력을 일관되게 비판하고 좌우진영의 협력을 주장하였다. 여운형은 신탁문제에 "지지할 점도 배척할 점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삼상회의 결정을 자세히 모르면서 덮어놓고 피로써 싸운다는 것은 경솔하고 동시에 덮어놓고 지지한다는 것도 너무 지나치다"라면서 찬탁 대 친탁이라는 경직된 이분법을 거부하였다(함양여씨대종회 1991, 268). 여운형은 김규식과 추진한 좌우합작 운동 과정에서는 "진정한 통일정부는 좌우의 완전한 합작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주장하면서 설령 좌나 우의 단독정부가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성이 없으며 결국 민족분열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하였

다(함양여씨대종회 1991, 299).

이러한 맥락에서, 여운형은 민주주의적 통일국가 수립이라는 목표에서 이탈해 권력투쟁에만 전력하는 정치세력을 좌우를 막론하고 비판하였다. 즉, "정치 지도층이 과거에는 정당 싸움으로 민중을 두 갈래로 나눴다면, 이번엔 탁치를 이용해 민족을 재분열시키고 있다"라거나, "우리 같은 지도자층이 없었던들 조선의 통일은 벌써 성공하였을 것"이라며 정치세력의 전면적 반성을 촉구한 것이다(함양여씨대종회 1991, 267-268). 또한, 그는 미소 공위를 방해하는 우익 세력에 대해서 "국제지식의 부족과 정권욕에 불타, 대의명분을 떠들고 순수한 애국인민을 오도하는 죄과는 참으로 크다"라고 비판하면서, 그러한 무모한 배외주의는 조선의 독립을 오히려 지연시켜 국가인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 주장하였다(함양여씨대종회 1991, 375; 377-378).

여운형은 좌익세력의 자파중심적인 분열적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좌익 3당(조선공산당, 인민당, 신민당) 합당을 둘러싸고 각 당내에서 합당파와 반대파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고, 동시에 자신이 주도하는 좌우합작이 박헌영 세력으로부터 비판받자 여운형은 그 책임을 자인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함으로써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여운형이 사장으로 있던 중외신보가 "민족을 위한다면서도 일부 소수층의 이익옹호와 자파의 권력획득에만 급급한 우익정객들과 한결같이 노동대중의 이익을 운운하면서도 항상 종파적 감정적 알력을 버릴줄 모르는 좌익인들도 금차의 몽양의 과감히 자기반에서 오는 결단에 비추어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함양여씨대종회 1991, 346-347).

여운형에 대한 11차례의 테러 기도와 암살은 그에 대한 좌우 세력의 극단적인 적대감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여운형이 극우·극좌세력을 배제하고 미군정의 일정한 지지하에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하자, 이들 세력은 여운형의 행태를 심각한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여운형 암살의 배후에 박헌영 세력을 의미하는 '종파분자'가 있다는 증언이나, 반대로 이승만을 배후로 하는 장택상 및 노덕술 등의 경찰

이 있다는 증언은 모두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조유식 1992, 78-85; 이정식 2007; 김삼웅 2016, 332-355).

IV. 결론

한반도 안보위기시 외세 담론의 생산과 유통은 국내정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한반도 내 상호 경쟁하는 정치세력은 외세 담론을 활용해 자파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행태를 반복적으로 보였다. 이들은 외세를 적대적 외세와 우호적 외세로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배격론을, 후자에 대해서는 의탁론을 생산하면서 이를 권력 강화와 경쟁 정치세력 공격에 활용하였다. 배격론 세력은 외세의 위협을 강조해 내부 결속을 강화한다거나 경쟁 세력을 외세 추수세력으로 규정하고 공격하였다. 반면, 의탁론 세력은 주변 강대국과의 연계를 통해 정치 권력을 강화하거나 탈취하려 했으며, 동시에 경쟁 세력을 의탁 대상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세력으로 공격하였다. 그러나 배격론이나 의탁론 세력의 실제 행태가 그 주장과 부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들 담론의 '정치성'을 반증한다.

한편, 외세에 대한 실용주의 담론은 배격론이나 의탁론과 달리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라는 문제해결을 우선시한다. 따라서, 실용론은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에 긍정적일 경우 어떠한 외세 및 국내 정치세력도 협력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실용론은 선험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을 우·적으로 구분하려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배격론이나 의탁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탈정치적 속성을 보인다. 그럼에도 실용론이 우·적 기준을 완전히 폐기했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실용론은 안보위기 해소의 저해 여부를 또다른 우·적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정치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용론은 배격론과 의탁론으로부터 정치적으로 '협공' 당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배격론이 실용론을 외세추수적이라 비판한다면 의탁론은 실용론을 우호적 외세에 대한 배신행위로 비난하는 것이다.

현시기 한반도 대내정치에서도 외세 담론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외세 배격론을 반복적으로 활용해 남한을 외세 추종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북한의 행태는 그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은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한미동맹 대화 추진에 대해 "스스로 외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자기의 목줄에 올가미를 더욱 조여달라고 애걸하고 있다"라거나(정래원 2020), 윤석열 정권의 대일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서 "사대 굴종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라며 비난하였다(심동준 2022). 북한 정권은 미국과 일본을 적대적 외세로 규정하고, 그들과 협력적인 남한을 외세 추종적이라 공격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남한 내 제 정치세력도 외세 담론을 통해 각각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굴욕적 사대주의"나 "반미친중 노선"이라고 공격한 사실, 그리고 사드 추가배치는 한중관계를 악화시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한반도 안보위기를 심화시킨다는 비판 등은 외세가 국내정치적으로 '소비'되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이성택 · 신은별 2022; 배지현 2022). 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소위 '멸콩' 논란 역시 동일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주변 강대국에 대한 명확한 배격 담론의 생산 · 유통이 현실적인 '비용'을 초래한다면, 정치세력간 이념 논쟁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담론 소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향후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한반도 국내정치에서 외세 담론의 정쟁화가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소하지 못하며 심지어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전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상황은 지양되어야 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 특히, 우호적 외세와 적대적 외세라는 경직된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대외전략 수립은 긍정적이라 할 수 없다. 그보다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최우선적 목표로 상정하고 그러한 전제로부터 대외전략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합리적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주민의 권익 보호가 한반도 국가의 궁극적 목표라 한다면,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설정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이 외교안보 문제의 전면적 탈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면적 탈정치화는 합리적 토론과 논쟁을 차단해 건설적 대안 제시마저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외교안보전략 수립과정에서 관련 주체들이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결국 어떠한 우·적 구분에 따라 논쟁을 진행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정파간 '진영논리'에 따른 가장 조야한 수준의 우·적 구분인가? 아니면, 문제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합리적 논쟁에서의 우·적 구분인가? 정파간 이해관계가 합리성을 압도할 때 한반도 안보위기가 뒤따랐다는 역사적 사실을 관련 행위자들은 기억해야할 필요가 있다.

최초투고일 : 2022. 8. 8
논문심사일 : 2022. 8. 17
게재확정일 : 2022. 9. 20

참고문헌

강만길 · 김광식 · 홍인숙 · 김남식 · 임종국 · 박현채 · 황한식 · 장상환 · 성한표 · 임헌영 · 김윤식 · 이광호. 2009.『해방전후사의 인식 2』. 파주: 한길사.

계승범. 2008. "계해정변(인조반정)의 명분과 그 인식의 변화."『남명학연구』26권, 439-478.

_____. 2010. "조선후기 대보단 친행 현황과 그 정치 · 문화적 함의."『역사와 현실』 제75호, 165-200.

김명호. 2005.『초기 한미관계의 재조명: 서면호 사건에서 신미양요까지』. 서울: 역사비평사.

김삼웅. 2016.『몽양 여운형 평전』. 서울: 채륜.

김상헌. 2012. 신해진 역주.『남한기략』. 서울: 박이정.

김성배. 2013. "청대 한국의 유교적 대중전략과 현재적 시사점."『국제정치논총』 제47집 5호, 117-134.

김옥균. 1971. 조일문 역주.『갑신일록』.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김자현. 2019. 윌리엄 하부시 · 김지수 편집. 주재영 옮김.『임진전쟁과 민족의 탄생』. 서울: 너머북스.

니콜로 마키아벨리. 강정인·김경희 옮김. 2012.『군주론』. 서울: 까치.

미셸 푸코. 이정우 옮김. 2011.『담론의 질서』. 서울: 새길.

_____. 심세광 · 오트르망 · 전혜리 옮김. 2016.『비판이란 무엇인가?-자기수양』. 파주: 동녘.

박정희. 2017a.『민족의 저력』. 서울: 기파랑.

_____. 2017b.『민족중흥의 길』. 서울: 기파랑.

박태균. 2007.『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파주: 창비.

박현모. 2004. "세도정치기 조선 지식인의 정체성 위기: 황사영백서를 중심으로."『동방학지』 123권 123호, 99-130.

박현채 · 안진 · 양동주 · 여현덕 · 임헌영 · 한준상 · 이완범 · 김남식 · 김태승 · 박혜숙 · 황남준. 2008.『해방전후사의 인식 3』. 파주: 한길사.

박홍서. 2021. "박정희 시기 북방외교의 정치경제적 배경: 통치성 위기와 그 대응."『한국동북아논총』 26집 1호, 23-41.

배지현. 2022. "'이재명은 친중 · 친북 · 반미'…'윤석열은 군사령관인가'."『한겨레신문』(2월 11일).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옮김. 1986.『한국전쟁의 기원』. 서울: 일월서각.

사라 밀즈. 김부용 옮김. 2001.『담론』. 서울: 인간사랑.
상탈 무페. 이보경 옮김. 2007.『정치적인 것의 귀환』. 서울: 후마니타스.
서중석. 1993.『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손형부. 1997.『박규수의 개화사상연구』. 서울: 일조각.
송건호 · 진덕규 · 김학준 · 오익환 · 임종국 · 백기완 · 김도현 · 이동화 · 유인호 · 이종훈 · 염무웅 · 임헌영. 2008.『해방전후사의 인식 1』. 파주: 한길사.
신석호. 2009. "독재체제 확립 '적대적 공존'… 北, 대화하며 '박정희' 고립 시도."『주간동아』(9월 30일).
신욱희. 2010. "데탕트와 박정희의 전략적 대응_박정희는 공격적 현실주의자인가?"『세계정치』 14집, 41-67.
심동준. 2022. "北선전매체, 尹정부 한일 행보 비방…'굴종, 애걸 추태'."『뉴시스』(5월 9일).
안토니오 그람시. 이상훈 옮김. 2006.『그람시의 옥중수고1』. 서울: 거름.
오코노기 마사오. 류상영 외 옮김. 2019.『한반도 분단의 기원』. 파주: 나남출판.
우승지. 2005. "데탕트 시대의 한미관계." 김용직 편.『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1945~1979』.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393-452.
원재린. 2007. "遲川 崔鳴吉의 학문관과 정치운영론."『한국사상사학』 29권 29호, 113-138.
유칠노. 1991. "유가의 권도에 관한 연구."『동서철학연구』 8권, 35-70.
이남희. 유리 · 이경희 옮김. 2015.『민중만들기』. 서울: 후마니타스.
이만채 편휘. 김시준 역주. 1984.『천주교전교박해사(벽위편)』. 서울: 삼경당.
이민원. 2002.『명성황후시해와 아관파천』. 서울: 국학자료원.
이성택 · 신은별. 2022. "첫 4자 토론서도 극명했던 이재명 '실용' · 윤석열 '친미' 안보 기조 [TV 토론]."『한국일보』(2월 4일).
이정 박헌영 전집 편집위원회 편. 2004.『이정 박헌영 전집 II』 [미군정기 저작편]. 파주: 역사비평사.
이완범. 2013.『한반도 분할의 역사: 임진왜란에서 6.25 전쟁까지』.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정식. 2007. "이정식 교수, '여운형은 박헌영파에 암살' 주장."『신동아』(9월 10일).
임부연. 2009. "유교 의례화의 정치학 -만동묘와 대보단을 중심으로."『종교문화비평』 15권, 159-182.
임지현. 2008.『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서울: 소나무.
정래원. 2020. "북한 선전매체, 한미 '동맹대화' 신설 비난…'예속과 굴종'."『연합

뉴스』(9월 20일).
정용욱. 2003. “역비논단-1945년 말 1946년 초 신탁통치 파동과 미군정-미군정의 여론공작을 중심으로.”『역사비평』 통권 62호, 287-322.
정진영. 1997. “19세기 후반 嶺南儒林의 정치적 동향 : 萬人疏를 중심으로.”『지역과 역사』 4권, 173-243.
조광. 1977. “황사영백서의 사회사상적 배경.”『사총』 21권, 347-371.
조유식. 1992. “여운형 암살 배후에 노덕술 있었다.”『월간 말』 72 (6월).
조희연. 2010.『동원된 근대화』. 서울: 후마니타스.
프란스 드 발. 장대익 · 황상익 옮김. 2019.『침팬지 폴리틱스』. 서울: 바다출판사.
프리드리히 니체. 강수남 옮김. 2003.『권력에의 의지』. 서울: 청하.
카를 슈미트. 김효진 외 옮김. 2012.『정치적의 것의 개념』. 파주: 살림.
칼 맑스. 최인호 외 옮김. 2010.『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고양: 박종철출판사.
한명기. 2007. “‘재조지은(再造之恩)’과 조선후기 정치사 - 임진왜란~정조대 시기를 중심으로.”『대동문화연구』 59권, 191-230.
_____. 2016. “이괄의 난이 인조대 초반 대내외 정책에 미친 여파.”『전북사학』 48, 93-136.
한성훈. 2012.『전쟁과 인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서울: 돌베개.
함양여씨대종회 편. 1991.『몽양 여운형 전집 I』. 서울: 한울.
허영란. 2013. “민중 운동사 이후의 민중사.” 역사문제연구소 편.『민중사를 다시 말한다』. 서울: 역사비평사, 27-47.
황병주. 2011. “박정희 체제 근대화 담론의 식민성.” 임지현 외 엮음.『근대한국, ‘제국’과 ‘민족’의 교차로』. 서울: 책과 함께, 255-289.
황태연. 2017.『갑진왜란과 국민전쟁』. 파주: 청계.
황현. 임형택 외 옮김. 2009.『역주 매천야록』 상. 서울: 문학과 지성사.

Adams, Rachel. 2017. “Michel Foucault: Discourse.” Critical Legal Thinking. https://criticallegalthinking.com/2017/11/17/michel-foucault-discourse/(최종검색일: 2022/07/30).
Bodin, Jean. Six Books of the Commonwealth. http://www.yorku.ca/cominel/courses/3020pdf/six_books.pdf(최종검색일: 2022/07/30).
Dewey, John. 1908. “What Does Pragmatism Mean by Practical?.” *The Journal of Philosophy, Psychology and Scientific Methods* 5(4): 85-99.

Foucault, Michel. 2003a. *Society Must be Defended*. New York: Picador.
_____2003b. "Truth and Power." In Paul Rabinow and Nikolas Rose (Eds.), *The Essential Foucault.* New York, NY: The New Press, 300-318.
Gourevitch, Peter. 1978. "The Second Image Reversed: The International Sources of Domestic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2(4): 881-912.
Johnston, Richard J. 1946. "U.S. Chief in Korea Receives Note From Russian Zone's Commander." *The New York Times* (January 10).
Levy, Jack S. 1989. "The Diversionary Theory of War: A Critique." in Manus I. Midlarsky (ed). *Handbook of War Studies*. Boston: Unwin Hyman, 259-288.
Memoranda of Conversation. 1979. President Jimmy Cart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Chung Hee et al. (June 30). Secret https://nsarchive.gwu.edu/document/22882-document-08-memoranda-conversation-president(최종검색일: 2022/07/30).
Oakes, Amy. 2012. *Diversionary War: Domestic Unrest and International Conflict*. Redwood C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Parkes, Harry Smith. 1883. "조선의 정세에 관한 Aston의 Memorandum 발송." http://contents.nahf.or.kr/search/itemResult.do?levelId=gk.d_0007_1550&setId=273778&position=0(최종검색일: 2022/07/30).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December 2, 1971.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19p1/d117(최종검색일: 2022/07/30).
Tilly, Charles. 1985. "War Making and State Making as Organized Crime." in Peter R. Evans,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 (eds). *Br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고종실록』 19년 8월 5일 무오.
『광해군일기』 [중초본] 11년 4월 8일 신유; 4월 9일 임술; 4월 11일 갑자; 12월 22일 신미/ 13년 6월 6일 병자/ 15년 3월 14일 갑진.
『근대한국국제정치관자료집』. 2012.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순조실록』 2년 4월 10일 경술.
『승정원일기』 고종 5년 10월 25일 무진/ 고종 7년 3월 7일/ 고종 10년 10월 25일 경자; 11월 3일 무신; 11월 11일 병진/ 고종 13년 1월 27일 기미/ 고종 18년 4월 2일 계사; 4월 3일 갑오/ 고종 18년 윤7월 8일 무술;

7월 20일 경술/ 고종 19년 6월 12일 임오/ 고종 33년, 1월 1일(음 2.13).
『인조실록』 1년 3월 21일 임자/ 8년 3월 11일 신묘/ 14년 2월 21일 병신; 9월 5일 병오; 11월 8일 무신; 11월 15일 을묘; 11월 16일 병진/ 15년 2월 9일 신묘.
『증보역주 遲川先生集 II』. 2008. 서울: 선비.
『瓛齋先生集』. 한국고전DB 수록 https://db.itkc.or.kr(최종검색일: 2022/07/30).
『興宣大院君史料彙編 2』. [일본외교문서] 2005. 서울: 석파학술연구원.

경향신문. 1969/07/23. "개헌문제로 사대 논쟁."
경향신문. 1971/04/15. "후보접전, 안보논쟁으로 가열."
매일경제. 1971/12/06. "국가비상사태선언."
매일신보. 1945/10/18. "이승만, 환국 제1성으로 전국민이 대동단결할 것을 방송."
매일신보. 1945/11/6. "이승만, 독촉 결의서에 대한 조공과의 차이점 등에 관해 기자회견."
민중일보. 1945/12/30. "오천년 피가 설레여! 사십년간 원한 새롭다."
서울신문. 1945/12/21. "이승만,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 방송."
자유신문. 1945/11/20. "이승만, 임정 환국과 獨促 지방조직 등에 관해 언급."
자유신문. 1946/03/21. "스튀코프 대표의 개회인사: 조선민주정부의 수립은 莫府 외상회의 결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원조."
중앙신문. 1946/01/01. "원단의 결의는 탁치 배격!!"
중외신보. 1946/08/07. "合黨問題에 對하야 朝共中委一部黨內聲明."

Justifying Power Struggle?:
Discourses on Foreign Powers and Domestic Politics in the Security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Park, Hongseo
Dongseo University, Center for Chinese Studies, Research Professor

| ABSTRACT |

During the security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political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trying to secure their domestic political interests by using discourses on foreign powers. The repudiators capitalize on threats from foreign powers in order to attack rival political forces by denouncing them as “followers of foreign powers.” The political forces claiming dependence on foreign powers take advantage of such reliance to procure their own political interests through the support of foreign powers. Meanwhile, the pragmatic forces on foreign powers rejects the so-called "good foreign power" or "bad foreign power" premise and regards any foreign power as a cooperative partner if it is positive in resolving the security crisis. Pragmatist forces criticize that repudiators and dependent forces hinder resolving the Korean security issue, while the latter extremists attack respectively pragmatists as followers of foreign powers or forces undermining relations with friendly foreign powers. In order to solve the Korean Peninsula problem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void rigid friend-enemy distinction toward foreign powers and take flexible strategies towards them.

■ Keywords: Foreign Powers, Discourses, the Korean Peninsular, Carl Schmitt, Michel Foucault